

NH Bank legal brief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논의 동향

2022. 11. 17.

- '22. 11. 14. 개최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은행법 개정 관련 금산 분리 제도 및 업무위탁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위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걸쳐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입니다.
- 본 리걸브리프에서는 위 은행법 개정안의 2대 주요 이슈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당행의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았습니다.

□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 (현행) 은행이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출자 방식으로 비금융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은행법 §27의2, §28).
-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금융회사가 부수업무로써, 또는 자회사 출자를 통해 영업 가능한 비금융업무의 범위에 대한 3가지 개선 방안을 논의

	개선 방안	신속성 ¹⁾	유연성 ²⁾	자율성 ³⁾
1안	<u>영위 가능한 비금융 업종을 열거</u> (=기존방식), + 신규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	○	×	×
2안	<u>업종 불문하고 비금융업 영위를 허용</u> ,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업종(건설업, 제조업 등)을 열거 하고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부수업무 비중 한도, 자회사 출자 한도 등	×	○	△
3안	부수업무 범위 - <u>1안 적용</u>	○	×	×
	자회사 출자 - <u>2안 적용</u>	×	○	△

- 1) 신속성: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및 유권해석만으로도 신속하게 제도 개선 추진 가능
 2) 유연성: 향후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도 법령 개정 등 별도 조치 없이 비금융업 영위 가능
 3) 자율성: 금융기관이 영업할 수 있는 비금융 업종을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은행권에 가장 유리한 개선 방안은 [2안]

- 향후 기술의 발전 및 금융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규제 방식
- 금지 업종 외의 범위에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보장
- 다만,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여 신속한 추진이 어려운 단점

- 금산분리 제도는 위 3가지 중에서 적어도 1안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행은 비금융업종을 전면 허용하는 제2안 지지 의견을 유지하여야 하면서 동시에 제1안이 채택될 것을 대비하여 당행이 영업을 희망하는 비금융 신규 업종을 사전에 검토하여 금융당국의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업무위탁 제도 관련 ① 은행의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 방식, ② 업무위탁 관련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① 은행의 본질적 업무 위탁 관련

현 행	개선 방안
은행의 제3자에 대한 본질적 업무 위탁 금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3①)	<p>(제1안)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 → 비핵심업무는 위탁 허용</p> <p>*핵심업무: 대출여부의 판단 등</p> <p>*비핵심업무: 신용조사, 담보물 평가 등</p>
	(제2안)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부 업무에 대해 예외적으로 위탁 금지

② 업무위탁 관련 리스크 관리·감독

-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
- 감독당국의 수탁자에 대한 직접 검사권한 신설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1안) 감독당국이 수탁자를 직접 조사, 계약해지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안) 감독당국의 직접 검사권한 신설 없이, 은행의 관리책임으로 남겨두는 방안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금융당국은 어느 정도의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해주겠다는 전제 하에서 그로 인한 “리스크의 관리·감독”에 중점을 두고 검토
 - 특히, 금융회사가 빅테크 기업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처럼, 위탁자인 금융회사가 더 이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아 수탁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 등 고려
-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당행 자체적인 업무 수탁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끝.